

투데이 칼럼

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의 핵실험이 일박했다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상황이 주목된다. 최근 긴장은 위원장의 사퇴로 열린 노동당 제8기 5차 전원회의는 북한의 주요 대내외 정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회의체였다.

정치국 상무위원과 후보위원은 물론 시·군·읍의 말단 간부들까지 총출동했다. 김정은 내각총리가 참석 간부 중 가장 먼저 호명돼 경제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다. 2017년 9월엔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고 '핵실험 진행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한 뒤,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핵실험을 막으려는 한미의 경고 메시지도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6월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미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는 고위급 메시지를 비공식 채널로 전달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물론 안보리 결의안 채택 불발을 모두 비판했다.

북한은 도발을 정당화하며 미국을 비난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무용론을 펼쳤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또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중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북 중 러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도 다양해지고 있다.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와 평안남도 개천, 평양, 함흥 등 4곳에서 짧게는 110km에서 길게는 670km 사거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

하루에 동시다발로 8발을 쏜 건 처음이다. 북한의 몰아치기 발사에 한미는 지대지 미사일로 대응한 데 이어, 공중 전력으로 경고에 나섰다. 이번에 쏜 8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 개발을 마친 신형 탄도미사일들로 추정된다.

이미 실전 배치했으며 유사시 다양한 표적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이다. 특히 한미가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 직후에 발사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

에 맞서 역시 8발의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 서해 상공에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전투기 20대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 공군은 판 앤더슨 기지에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4대를 전진 배치했다.

미 해군은 레이전함과 링컨함 등 핵항모 2척을 포함해 합정 15척, 군용 항공기 200여 기를 동원해 '용감한 방패' 훈련을 판 인근 해역에서 진행했다. 문제는 한미의 대북 억제력 강화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등을 막을 수 있느냐이다.

4년 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핵 단추 실전'을 주고받으며 전쟁 위기가 고조됐다. 당시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ICBM인 화성-14형을 쏘고,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로 무력시위를 펼쳤다.



정복규  
논설위원

하지만 북한은 미국 관 기지 공격을 위협했고,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발사까지 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B-52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를 한미 훈련에 동원했다.

그러자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로 판 포격 태세를 이어 갔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편으로 군사적 긴장 고조와 안보 불안이 커졌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강 대 강 대치는 더 격렬해질 거란 우려다.

북한의 핵실험 일박 징후가 잇따르면서 한미일 공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과 외교차관들이 잇따라 만나 북한 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확장 차 단에도 활용되는 분위기다.

각종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군사적 대응만으론 억제하기 어렵다.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는 언제 작동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대북 추가 제재 등 국제 사회의 대응을 놓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구도는 더욱 분명해졌다. 한반도는 상당 기간 대결 국면 속에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윤창호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재범할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최근 윤창호법 조항이 위험 결정이 난 가운데 음주운전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위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처음 파기 환송됐다.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음주운전으로 횡단 보도를 건너던 2명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윤창호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명시한 '제148조의2의 1항'에 대해 "재범 기간과 형량에 상관없이 가중 처벌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당장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강력한 처벌보다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1회·음주측정 거부 1회, 음주측정 거부 2회의 경우 모두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이번 위험 결정을 '음주운전 처벌 완화' 신호로 잘못 인식하거나 기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반응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처벌 강화보다 예방 조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자들의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 시 동을 걸도록 하는 잠금장치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

최근 한미 통화 협력 방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란 통화교환(스왑)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스왑은 '바꾸다, 교환하다'는 의미가 있다.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원화를 미국의 중앙은행에 맡기고 달러화를 가져오는 외환 거래다. 유사시 자국 화폐를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특히 미 달러화는 기축통화로 위기 국면에서 외화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바 있다.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시회와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그러나 최근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국이 현재 상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국가는 영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캐나다 등 주요 5개국뿐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전에 불필 협상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통화스와프라는 용어 자체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졌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 제정은 물론 금융·외환 시장 안정과 한미 간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러시아군 포격 부상자 살피는 구조대



지난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흐르키우의 바라바노보 시장에서 긴급구조대가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다친 사람을 돌보고 있다. 이날 흐르키우에서 가해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무르무, 인도 사상 첫 부족 출신 대통령에 당선



루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당선인이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있는 임시 거주지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인도국민당(BJP) 소속 여성 정치인이자 신랄 부족 출신 무르무가 인도 대통령에 당선돼 사상 첫 부족민 출신 대통령이 됐다. 무르무 당선인은 25일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